



### 정보통신기기 인증관련 제도 개선 입법 예고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을 규율하는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및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손질하여 2005년 6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인증 유형별(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로 인증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일 성능의 부품을 다수업체에서 공급받아 제조된 완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1회만 시험을 실시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인증서 발급과 동시에 인증번호를 부여하던 것을 최초 인증 신청시 업체별로 식별부호를 부여해 업체가 사전에 인증번호를 알 수 있도록 변경하고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의한 상대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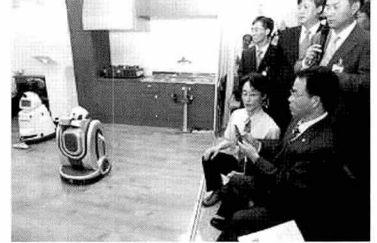
이울러 수퍼컴퓨터 등 국내 반입이 어려운 대형 정보기기는 업체가 요청한 장소에서 시험을 허용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분야를 기술기준별로 세분화한다.

또한 인터넷 민원을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 변경신고 등 인증 관련 모든 민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업체들의 비용부담과 제품 출시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정통부는 향후에도 민간인증기관 및 자기적합선언제도 도입 등 선진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_ 정통부 전파방송정책국 전파이용제도과 정상준 사무관 (750-2423, sijeong@mic.go.kr)

### 네트워크 기반 지능형 로봇 시연회 개최

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29일 14층 대회의실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정용 로봇 등의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된 로봇은 IT839 전략의 한 분야인 지능형 로봇 개발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물로써, 네트워크 로봇 시스템의 핵심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IT기반 지능형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이 되는 서버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전)에 두고 가정과 우체국 환경으로 꾸민 정부 회의실에서 가정용 정보 콘텐츠 로봇, 연구용 로봇, 공공도우미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배치하여 실시했다. 정통부는 독립형 로봇으로는 시장 창출과 사업모델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초고속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기반 로봇의 개념을 정립하여 작년 1월부터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지능형 로봇 연구개발 과제는 정보콘텐츠 로봇 개발, 공공도우미 로봇 개발, URC 인프라 시스템 개발, 미들웨어 등 다양한 핵심 요소기술, 지능형 로봇 센서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55개 기업, 5개 연구소, 20개 대학에서 총 8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인간형 로봇인 마루와 아라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시연회에 이어, 정보콘텐츠 로봇은 금년 10월부터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도우미 로봇은 11월부터 우체국을 대상으로 각각 시범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_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산업기술팀 정규연 사무관 (750-2361, kyjung@mic.go.kr)

### 정통부, 433MHz대 RFID 기술기준 마련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소장 이근협)가 제1차 기술기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33MHz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엔 마련된 433MHz대 RFID 기술기준은 컨테이너 등 대형 물류의 국제적인 이동시 편리하게 통관이 가능하도록 ISO/IEC 18000-7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주파수형식, 사용주파수, 출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433MHz대 RFID는 배터리를 내장하지 않는 기존의 수동형 RFID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능동형 RFID로, 약 100m 내외의 거리에서 통신이 가능함에 따라 공항, 항만, 부두, 컨테이너 집하장 등 비교적 대형 물류의 운반, 저장 등의 용도에서 편리하게 사용된다. 433MHz대 RFID에 대한 기술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IT839 정책의 실현 및 U-korea 시대 진입과 산업현장의 자동화 등 물류산업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_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조성태 사무관 (710-6570, cst@rrl.go.kr)

## 개정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7월 1일 시행

7월 1일부터 전력선통신설비에 대한 허가규제가 완화되어 전력선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개정 전파법(2004.12.30 일 공포)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전파이용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전계강도가 500마이크로볼트( $\mu\text{V}/\text{m}$ ) 이하인 전력선통신설비는 허가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 주파수도 450kHz 이하에서 30MHz 이하로 확대하였다. 또한 국가기관 등에 대한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을 공용통신을 위한 무선국은 10년, 외국공관이 운용하는 무선국은 5년, 외국국빈 경호 또는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은 행사지원에 필요한 기간동안으로 하였다. 아울러 사용승인한 주파수의 이용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이용이 저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회수하는 등 전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정 전파법에 의해 신설되는 전파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이밖에 허가된 무선국의 변경시 형식인증을 받은 범위 내에서 주파수만 변경하는 경우 무선국 변경검사를 면제하였고, 대가할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 개설신고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등 무선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2006년 상반기에 상용화 예정인 WiBro와 위치기반서비스(LBS)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였다.

문의\_ 정통부 전파방송정책국 담당자 최현승 (750-2414, hschoi9@mic.go.kr)

## 정부통합전산센터 2단계 구축사업자 확정

정보통신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전자정부 31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2단계 구축사업과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IP연동기반 2단계 구축사업을 각각 선정했다. 추진단은 220억원 규모의 정부통합전산센터 2단계 구축 프로젝트 사업자로 SK C&C(주)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24일 양일간 실시한 정부통합전산센터 2단계 구축 프로젝트 사업자 평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자격 평정산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관련 전문가들과의 검토를 거쳐 재산정한 결과 최종 선정되었다. 아울러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IP연동기반 2단계 구축 프로젝트는 삼성SDS-데이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의\_ 정통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 김영표 팀장 (750-0150, ypkim@mic.go.kr)

## IT- SoC 중소기업 애로사항 지원 간담회



IT-SoC 업계 간담회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6월 24일 'IT-SoC 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IT-SoC 업계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IT-SoC업계 대표 15

명이 참석해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사항을 건의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시장에 밀착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소기업 현장지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코아로직, 토마토LSI 등 IT-SoC 업계 15개사 대표가 참석했고, DMB칩, 휴대폰 멀티미디어칩, LCD 구동칩 등 주요 제품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업체 대표들은 자금조달과 우수 인력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히고 IT-SoC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시제품 제작 서비스 확대, 파운드리 환경 개선, 시스템 업체와의 협력 강화 등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세계적인 IT-SoC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_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산업기술과 이옥헌 사무관 (750-2363, okheon@mic.go.kr)